2023~2027년
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

2023. 8.

기 획 재 정 부

순 서

Ⅰ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····· 1

Ⅱ. 2023~2027년 경제여건 및 전망 ····· 2

Ⅲ. 2023~2027년 재정운용 방향 ····· 6

Ⅳ.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····· 10

Ⅴ. 재정혁신 추진방향 ····· 14

[참 고]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····· 22

Ⅰ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

□ **중기적 시계**에서 **정부의 재정운용 전략**과 **목표**를 **제시**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
○ **5회계연도 기간**에 대한 **재정운용계획**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**매년 수정·보완**

○ **'04년 최초 수립**('04~'08년 계획) 이후 **'07년**부터 **국회**에 **제출**

○ 국가재정법 개정('14년)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**국회제출 30일전**까지 **수립방향 국회 보고** 의무화(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)

□ **관계부처, 민간전문가** 등의 **폭넓은 의견수렴 과정**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**실효성** 및 **투명성** 제고

○ **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, 분야별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지원단** 및 **재정운용전략위원회** 운영 등 다양한 **의견 수렴** 절차 진행

<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>

- **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** (기획재정부 → 각 부처, '22.12월)
  *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('23.1월말)
- **재정운용전략위원회** 운영,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·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('23.1월~)
- **분야별·지역별 예산협의회** 및 **간담회** 개최 ('23.4~8월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**지원단 구성·운영** ('23.5월~)
- 2023년 **국가재정전략회의** 개최 ('23.6.28)
- **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**을 **기획재정위원회**에 보고 ('23.8.2)
- **재정정책자문회의**를 통해 관계부처·지자체·전문가 의견수렴 ('23.8.23)
- **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** 제출 ('23.9.1)

Ⅱ. 2023~2027년 경제여건 및 전망

1 대내외 경제 여건

세계경제

□ (2023년) 글로벌 고물가 흐름이 **둔화**되는 가운데, **서비스업 회복세**가 이어지고 있으나, **글로벌 긴축** 등으로 **교역** 및 **성장세 부진**

* 글로벌 PMI(p) : <제조업> ('23.1/4)49.5 (2/4)49.3 <서비스업> ('23.1/4)52.4 (2/4)54.9

○ 최근 세계경제는 **원자재*·금융시장 변동성** 및 **미국 국채금리 상승,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** 등 **불확실성**이 높은 상황

* 러·우 전쟁 향방, 사우디 등 OPEC+ 감산 영향, 흑해곡물협정 중단 영향 등

○ 향후 **서비스업 회복세**는 점차 **둔화**되겠으나, **재고조정, IT 수요 회복** 등으로 **교역·제조업**은 **점차 회복** 전망

□ (2024년 이후) 중장기적으로 **물가·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**되겠으나, **리스크 요인 잠재**

○ **'24년**은 **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**되는 가운데, 그간 부진했던 **세계교역·제조업 개선** 등으로 **완만한 성장세 회복** 흐름 전망

* 세계교역량 전망(%) : <IMF> ('23)2.0→('24)3.7 <OECD> ('23)1.6→('24)3.8

○ **중장기적**으로 **원자재 가격 추이, 글로벌 분업구조** 및 **공급망 재편, 지정학적 갈등** 등 높은 **불확실성** 지속

세계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(%)

		'23	'24	'25	'26	'27	'28
세계 성장률		3.0	3.0	3.2	3.2	3.1	3.0
- 선진국	성장	1.5	1.4	1.8	1.9	1.8	1.8
	물가	4.7	2.8	2.1	1.9	1.9	1.9
- 신흥국	성장	4.0	4.1	4.0	4.0	3.9	3.9
	물가	8.3	6.8	5.2	4.7	4.6	4.4

* 출처 : World Economic Outlook(IMF, '23~'24년은 7월 전망, '25년 이후는 4월 전망 기준)

국내경제

□ (2023년) 물가·고용이 **비교적 안정적**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, 그간 부진했던 **반도체 중심**으로 **수출 개선** 조짐

* 소비자물가 상승률(%) : ('23.1) 5.2 (2) 4.8 (3) 4.2 (4) 3.7 (5) 3.3 (6) 2.7 (7) 2.3
* 취업자수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23.1)41.1 (2)31.2 (3)46.9 (4)35.4 (5)35.1 (6)33.3 (7)21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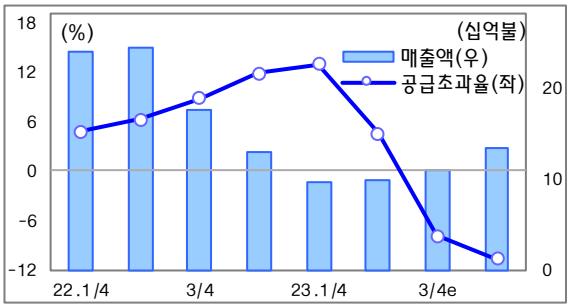
○ **하반기**로 갈수록 **IT 업황 회복, 중국인 방한관광객 유입 확대** 등에 힘입어 **성장세 개선** 전망

* 성장률(전기비, %): ('22.1/4) 0.7 (2/4) 0.8 (3/4) 0.2 (4/4)△0.3 ('23.1/4) 0.3 (2/4) 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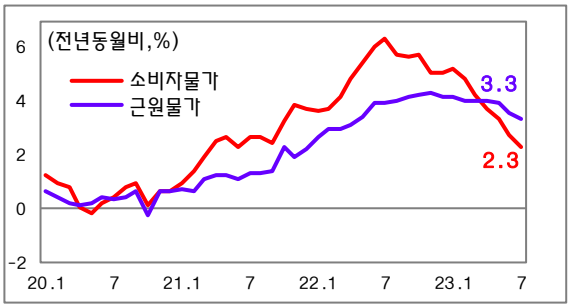
- 다만, 美·中 등 **주요국 경제상황** 및 **금융시장** 관련 **불확실성 상존**

○ **물가**는 **오름세가 둔화**되겠으나, **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, 기상여건** 등 **불확실성 지속**

글로벌 D램 공급초과율 및 매출 전망



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



□ (2024년 이후) '24년부터 **회복세가 본격화**될 것으로 **예상**되나, **대내외 불확실성** 상존

○ '24년은 **글로벌 물가안정** 흐름, **세계교역·제조업 개선, IT업황 회복** 등으로 우리경제 **회복세 강화** 전망

* '24년 IMF 주요국 성장 전망(%) : (韓) 2.4 (선진국) 1.4 (美) 1.0 (유로존) 1.5 (英) 1.0 (日) 1.0

○ **중장기적**으로 **물가 안정세, 글로벌 경기회복** 등은 **긍정적 요인**

- **인구구조 변화** 등에 대한 **대응을 강화**하는 한편, **성장잠재력 확충**을 위한 **규제혁신** 및 **노동·교육·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** 필요

2 재정운용 여건

재정수입

□ (국세수입) **경기변동**에 따라 **국세수입 규모**는 **일시적**으로 **감소**하겠으나, **중기적**으로는 **경기회복**과 함께 **증가세 유지** 예상

○ **'23년**에는 **대외경제 여건 악화**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**'22년 대비 감소**할 것으로 예상

○ **'24년 이후**에는 **경기회복**에 따라 **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전망**이나, **세계경제 회복 지연** 가능성 등 **불확실성도 상존**

□ (국세외수입) **사회보장성 기금 수입** 중심으로 **증가**할 전망이나, 경기 여건에 영향을 받는 **법정 부담금** 등은 **변동 가능성**도 존재

○ **기금수입**은 **現 상승 추세**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

- 국민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 등 **사회보장성 기금**의 가입자 확대, 임금상승 등에 따라 **지속적 증가** 예상

○ **세외수입**은 특이소요 등으로 변동이 있으나, **중장기적**으로 **완만한 증가추세**

재정지출

□ 중장기적으로 **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, 잠재성장률 저하** 등 **구조적 문제 대응**을 위한 **지출소요 증가 전망**

○ **저출산·고령화** 등으로 **복지지출이 증가**하고 **기후·에너지 위기 대응** 등을 위한 **재정의 역할** 확대 요구

○ **첨단과학기술** 투자 및 **전략산업** 육성 등 우리 경제의 미래 **성장잠재력 확충**을 위한 지출소요도 상존

□ **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**에 대한 **요구도 높아지는 상황**

○ **현장 수요와 괴리**된 사업, 부처간·부처내 **유사중복 사업, 성과미흡** 사업 등을 정비하여 **재정누수 차단**

○ **절감된 재원**을 **사회적 약자 보호**와 **미래 대비**를 위해 **재투자**

⇒ 강도 높은 **재정개혁**으로 **재정 낭비요인**은 **철저히 제거**하는 가운데, **재정이 해야 할 일**에는 **제대로, 과감하게 투자**

'22~'26년 계획 대비 '23~'27년 부처요구

(단위 : 조원, %)	'22	'23	'24	'25	'26	'27	증가율
▪ '22~'26년 계획(A)	607.7	639.0	669.7	699.2	728.6	-	4.6
▪ '23~'27년 부처요구(B)*	-	638.7	723.8	776.5	824.9	869.6	6.3**
▪ 계획대비 추가요구(B-A)	-	△0.3	54.1	77.3	96.3	-	-

*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('23.1월말)
** '24~'27년 연평균 증가율

Ⅲ. 2023~2027년 재정운용 방향

1 재정운용 기본방향

1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

○ 새 정부 출범 후 전환된 **건전재정기조**를 **흔들림 없이 견지**

○ 이를 통해 **국가채무** 및 **재정수지**를 **안정적**으로 **관리**하여 **지속가능**한 **재정운용**의 **기틀 확립**

2 약자복지 강화, 미래 준비 투자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

○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, 청년·노인·장애인 등 **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진정한 약자를 더 두텁고 촘촘히 보호**

○ **미래 전략기술 확보,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** 등을 통해 **미래 성장동력 확충**

○ **경제재도약**을 위한 투자 활성화, **스타트업코리아 뒷받침** 등 **민간경제 활력 제고**를 통한 **일자리 창출** 지원

○ **첨단강군 육성, 공공질서·안전** 시스템 강화, **전략적 ODA** 등 **국가 본질적 기능**의 **차질없는 수행 뒷받침**

3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 지속 추진

○ **타당성·효과성 미흡 사업, 외부**(감사원, 국회, 언론 등) **지적 사업,** 사회·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지 않는 **관행적 사업** 등을 **원점 재검토**하여 **재정사업의 양적·질적 개선 추진**

○ 재정준칙 법제화, 재정 성과관리 강화, 민간투자 활성화·국유재산 적극 활용 등 **강도 높은 재정혁신 지속**

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

재정수입

□ **재정수입**(총수입)은 '23~'27년 기간 중 **연평균 3.7% 증가**할 전망

○ **국세수입**은 **'23~'27년** 기간 중 **연평균 2.7% 증가**할 전망

- **대외여건 악화** 등의 영향으로 **국세수입 규모**는 **일시적**으로 **감소**할 것이나, **경기회복**에 따라 **'24년 이후**에는 **증가세 유지 예상**

○ **세외수입**은 '23~'27년 기간 중 **연평균 4.6%** 증가할 전망

○ **기금수입**은 '23~'27년 기간 중 **연평균 5.4%** 증가할 전망

< 중기 재정수입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3년*	'24년	'25년	'26년	'27년	연평균 증가율
▣ 재정수입	625.7	612.1	661.5	692.0	722.3	3.7
○ 국세수입	400.5	367.4	401.3	423.2	444.9	2.7
○ 세외수입	25.0	27.9	33.6	30.9	29.9	4.6
○ 기금수입	200.3	216.8	226.6	237.9	247.5	5.4

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□ **조세부담률**은 **'23년 세수감소 영향**으로 **낮아진 후,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**에 따라 **완만히 상승**할 것으로 예상

<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>

(단위 : %)

	'23년*	'24년	'25년	'26년	'27년
▣ 조세부담률	23.2	20.9	21.5	21.6	21.7
▣ 국민부담률	31.4	29.3	29.6	29.5	29.3

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재정지출

□ **재정지출**(증가율)은 '23~'27년 기간 중 **연평균 3.6%** 수준으로 관리

○ **'24년**은 **'23년 국세수입 감소**로 **지출 증가율**이 다소 **하향**, **'25년**은 **회복된 세입기반, 건실한 재정구조**로 **증가율 상향**

○ **'25년 이후 지출 증가율**은 **단계적 하향** 조정하여 **건전재정 기조**를 이어가되, 재정혁신 등을 통해 **필요 재원 확보**

□ **의무지출**은 '23~'27년 기간 중 **연평균 5.0%** 증가

○ **고령화·저출산** 등으로 인한 **복지분야 법정지출, 국채이자** 등 **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**

□ **재량지출**은 '23~'27년 기간 중 **연평균 2.0%** 증가

○ **4대 분야 중점투자, 민생경제 회복지원, 국정성과 창출** 등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

○ 사업타당성·효과성을 **원점 재검토**하여 **재정낭비 요인을 차단**하고 절감된 재원은 **필요한 분야**에 **재투자**

< 중기 재정지출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	'23년*	'24년	'25년	'26년	'27년	연평균 증가율
▣ 재정지출	638.7	656.9	684.4	711.1	736.9	3.6
(증가율)	(5.1)	(2.8)	(4.2)	(3.9)	(3.6)	
○ 의무지출	340.3	348.2	373.3	394.0	413.5	5.0
(비중)	(53.3)	(53.0)	(54.5)	(55.4)	(56.1)	
○ 재량지출	298.4	308.7	311.1	317.1	323.4	2.0
(비중)	(46.7)	(47.0)	(45.5)	(44.6)	(43.9)	

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□ **(재정수지)** '24년에는 **관리수지 △3% 초과**가 **불가피**하나, **'25년 이후**는 **재정준칙안**을 **준수**하고 **점진적**으로 **개선**되도록 관리

○ **'27년 관리수지**는 **△2.5% 수준**으로, **'23년 △2.6% 보다 개선**

※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**통합재정수지*** 역시 '25년이후 점차 감소하여 **'27년 △0%대 중반**으로 **'22~'26년 관리계획 수준 유지**

* 통합재정수지 = 관리재정수지 + 사회보장성기금 수지

□ **(국가채무)** 국가채무비율은 **'27년 50%대 중반 수준**으로 관리

○ **국가채무비율 증가폭**은 **'25년 다소 증가**하나, 그 이후 **매년 감소***

* 연도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(%p): ('24) +0.6, ('25) +0.9, ('26) +0.6, ('27) +0.5

<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3년*	'24년	'25년	'26년	'27년
▣ 관리재정수지	△58.2	△92.0	△72.2	△69.5	△65.8
(GDP대비, %)	△2.6	△3.9	△2.9	△2.7	△2.5
※ 통합재정수지	△13.1	△44.8	△22.9	△19.2	△14.6
(GDP대비, %)	△0.6	△1.9	△0.9	△0.7	△0.5
▣ 국가채무	1,134.4	1,196.2	1,273.3	1,346.7	1,417.6
(GDP대비, %)	50.4	51.0	51.9	52.5	53.0

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Ⅳ.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

< 기본 방향 >

◇ **건전재정 기조 견지** 下 **약자복지 강화, 미래 준비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** 등 **정부가 해야 할 일**에는 **중점 투자**

① (**사회**) 보다 **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성**으로 **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**를 **구축**하고, **청년일자리 창출**과 **취약계층**의 **자립** 지원

② (**경제**) 핵심 교통인프라 확충, 수출 드라이브 촉진,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투자 등 **미래 성장동력 확충**

③ (**행정**) **공공질서 및 안전시스템**을 **강화**하고, **글로벌 중추국가**로서의 **책임·역할**도 **강화하는 한편, 첨단전력 군대 양성**

◇ **지출 재구조화** 등 **재정혁신**을 통해 **확보된 재원**은 **핵심 정책과제**에 **재투자**

1. (사회분야)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□ (**보건·복지**) 생계·주거·교육급여 인상, 노인일자리 확대 등 **저소득, 취약계층 대상 생계·돌봄·일자리 등**에 대한 **지원 강화**

○ 다문화 가정, 한부모·청소년 부모,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아동 등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**사회적 약자**를 발굴하여 **맞춤형 지원**

○ 소아환자 **야간·휴일·지역 진료사각지대 해소** 및 **응급환자 최종 치료전 사망사고 근절 등**을 위한 **인프라 확충**

□ (**일자리**) **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**을 위해 일할 의지 없는 청년, 구직청년 등 **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**

○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**직무성과 임금 개편** 등을 지원하고,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**실근로시간 단축 유도** 등 **노동개혁**을 **뒷받침**

○ 맞돌봄이 확산되도록 **육아휴직기간·영아기특례**를 확대하고, **근로시간 단축·대체인력 지원 확대** 등 **일가정양립 지원**도 **강화**

□ (**교육**) 3~5세 누리과정, 고교 무상교육 등 **기본 교육수요** 지원으로 취약계층 **교육비 부담을 경감**하고, 생애주기별 **교육격차**도 **해소**

○ **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**을 확대하고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**대학의 자발적 혁신**을 유도하는 한편, 국립대학의 **시설·인프라**도 강화

□ (**문화·체육·관광**) 모태펀드·이차보전 등의 **금융지원 강화** 등 **K-콘텐츠 경쟁력 강화**를 **지원**하고, **OT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대응**도 지원

○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**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**하고, **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**를 위한 **생활·전문 체육 지원**도 **강화**

□ (**환경**) 국가하천 지류 및 지방하천 위험지역을 본격 정비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**극한 홍수·가뭄**으로부터 **국민 안전 보장 강화**

○ **녹색산업 육성** 및 **해외진출 지원**, **저탄소 경제 전환**을 **가속화**하는 한편, **환경 취약계층** 보호를 강화하고, 쾌적한 **대국민 환경서비스**도 제공

2. (경제분야)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

□ (**산업·중기·에너지**) **무역금융, 해외마케팅, 디지털 수출** 지원 등 **수출 드라이브 추진**을 **적극 뒷받침**하고, **투자 인센티브**를 **대폭 강화**

○ 효율적 에너지 사용 지원 및 **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**하고, **첨단산업 초격차 확보**를 위한 **인프라·인력양성 투자**도 확대

○ **중소기업 재도전**을 **뒷받침**하고, 수출지원 등 **성장 환경**을 **조성**하며, **취약 소상공인**의 **경영 부담 완화** 및 **경쟁력 강화**도 지원

□ (**SOC**) 수도권 GTX, 지역 교통인프라 등 **핵심 국가교통망 적기 개통** 및 **지역 혁신거점 조성** 지원

○ **대형사고 예방**을 위해 **노후시설 유지보수·개량 적기 추진**을 지원하고, **자율주행차 상용화** 등 교통혁신을 위한 **선도기반 조성**

□ **(농림·수산) 직불금 확대 등 농어민의 소득안정**을 **지원**하고, 전략작물 등 **식량안보** 및 **농수산물 물가안정**을 위한 수급관리 강화

○ **청년 농어업인** 육성, **스마트 농어업** 확산, 농식품 **수출지원** 강화 및 **민간투자 활성화** 등 **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지원**

□ **(R&D) AI, 첨단바이오, 반도체, 디지털** 등 **12대 국가전략기술**에 있어서는 **혁신기술 내재화에 집중 투자**

○ 첨단분야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**대규모 전략프로젝트**를 추진하고,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**글로벌 R&D 확대**

3. (행정분야)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

□ **(외교·통일)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** 및 **2025 APEC 정상회의 준비, 민주주의 정상회의** 등 **능동적 외교 지원**

○ **글로벌 중추국가**로서 **역할과 책임 이행** 등을 위한 ODA를 **대폭 확대 추진**

□ **(국방)**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**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**에 집중 투자하고, **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**을 **전략적 육성**

○ 병 봉급 및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 등 **장병 사기**를 **진작**하고, **병영환경 개선 확대** 등 복무여건 개선

□ **(일반·지방행정) 지역소멸 대응**을 위한 **지역활성화 투자 펀드** 조성으로 **지역경제 효과**가 큰 **대규모 사업**을 속도감 있게 추진

○ **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**으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, **수해 예방**을 위해 **재해위험지역 정비**도 **대폭 확대**

□ **(공공질서·안전)** 아동・여성・서민 등 사회적 약자 대상 **흉악・신종 범죄**에 대한 **예방을 강화**하고, 취약계층 **범죄피해자 보호・지원** 강화

○ 대형재난에 대응, **예방인프라 투자와 사전적 대응역량을 강화**하고,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**스마트 재난관리체계** 구축

< 2023~2027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구분	'23	'24	'25	'26	'27	'23~'27 연평균
총 지 출	**638.7 (5.1)**	**656.9 (2.8)**	**684.4 (4.2)**	**711.1 (3.9)**	**736.9 (3.6)**	**(3.6)**
1. 보건·복지·고용	226.0 (3.8)	242.9 (7.5)	252.2 (3.9)	262.5 (4.1)	273.4 (4.1)	(4.9)
2. 교육	96.3 (14.4)	89.7 (△6.9)	95.7 (6.7)	99.8 (4.3)	104.1 (4.3)	(2.0)
3. 문화·체육·관광	8.6 (△5.4)	8.7 (1.5)	8.9 (1.8)	9.1 (2.7)	9.4 (2.6)	(2.1)
4. 환경	12.2 (2.6)	12.6 (2.5)	12.8 (1.9)	13.2 (3.0)	13.5 (2.6)	(2.5)
5. R&D	31.1 (4.3)	25.9 (△16.6)	27.6 (6.4)	29.5 (7.0)	31.6 (7.0)	(0.7)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26.0 (△17.0)	27.3 (4.9)	27.6 (1.1)	28.4 (3.1)	29.3 (3.1)	(3.0)
7. SOC	25.0 (△10.7)	26.1 (4.6)	26.2 (0.1)	27.3 (4.2)	28.0 (2.8)	(2.9)
8. 농림·수산·식품	24.4 (2.9)	25.4 (4.1)	25.7 (1.4)	26.2 (1.8)	26.7 (1.8)	(2.3)
9. 국방	57.0 (4.4)	59.6 (4.5)	61.6 (3.3)	63.6 (3.4)	65.8 (3.4)	(3.6)
10. 외교·통일	6.4 (7.6)	7.7 (19.5)	7.8 (1.3)	7.9 (1.2)	8.0 (1.0)	(5.8)
11. 공공질서·안전	22.9 (2.7)	24.3 (6.1)	24.9 (2.5)	25.8 (3.4)	26.7 (3.4)	(3.8)
12. 일반·지방행정	112.2 (14.3)	111.3 (△0.8)	120.1 (7.9)	124.8 (3.9)	129.3 (3.6)	(3.6)

Ⅴ. 재정혁신 추진방향

1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

高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엄격한 총량관리

□ **재량지출 감축, 의무지출 효율화** 등 **엄격한 총량관리 실시**

○ 집행부진, 연례적 이·전용 사업, 관행적 보조·출연·출자 등의 **재량지출 사업**을 **감축**하여, **재투자 재원**으로 **활용**

○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·반복수급 등에 대한 **제도개선,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** 등을 통해 **의무지출 효율성 제고**

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편

□ 모든 보조사업 대상으로 사업의 **정책적 타당성·효과성 원점 재검토**하고, 타당성·효과성 미흡사업은 **삭감·폐지 등 구조조정**

○ **장기간 관행적 지원 사업**, 민간·지자체 등 **역할재조정 필요 사업**, 국회 등 **외부 타당성 지적 사업** 등 타당성 미흡사업 정비

○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**각종 평가 미흡, 유사중복·집행부진, 전달체계 정비 필요사업** 등 효과성 저조사업 정비

□ **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**을 위해 **부정수급 모니터링, 시스템 개선** 등 추진

○ **e나라도움 시스템의 부정징후 모니터링 체계**를 통해 **부정징후 의심사업** 추출·통보, **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화**

○ **국고보조금** 및 **지방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**을 통한 **국민**의 보조금에 대한 **정보 투명성** 및 **국민 이용 편의성** 제고

□ **신규·기존 보조사업**의 실효성, 적격성 등 **재정건전성 확보**를 위해 **강도 높은 평가** 실시

○ 100억원 이상 **신규 보조사업**에 대해 **적격성 심사제** 및 **기존 보조사업**의 **일몰제** 시행을 통해 **보조사업의 심사·평가 강화**

○ **최근 3년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**(감축, 폐지, 사업방식 변경 등)를 **예산**에 **반영**하며, **평가 미대상 사업**은 **각 부처**가 **사전점검 실시**

2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및 성과관리 강화

예타제도 개편

□ **경제·사회여건 변화**를 감안하여 旣 발표한 **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**('22.9월)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

○ **예타대상 기준금액 변경**(총사업비 500→1,000억원, 국비 300→500억원)을 위한 **국가재정법 개정** 지속 추진

○ **예타 면제요건**을 **구체화**하고, **면제사업**에 대한 **투명성**을 제고하는 등 **예타 면제 관리 강화**

핵심재정사업 全주기 성과 집중관리

□ **국정비전**이 반영된 **12대 핵심재정사업(군)***을 선정하여 **全주기적**으로 **밀착·집중 관리**하고 이를 통해 5년간 **가시적 성과 도출**

*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,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, 장애인 돌봄,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, 산불대응 능력 강화, 팁스(TIPS) 프로그램 등

○ 핵심재정사업별 **성과지표** 및 **목표치**(~'27)를 설정하고, **목표 달성도**를 **지속 점검**하는 한편, 목표달성 **장애요인 해소**를 위한 **제도개선** 검토

○ 핵심재정사업별 **성과관리작업반***을 **구성**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**제도개선방안** 마련

* 민간전문가, 소관부처(주관·협조부처), 기재부, 조세연으로 구성

○ **재정성과점검회의**·재정운용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밀착·집중 관리하고, **현장점검*** 수시 실시

* 기재부, 사업부처·지자체, 전문가, 정책수혜자, 대학생 기자단 등 참여

○ 핵심재정사업의 **성과** 및 **제도개선 방향** 등 연도별 **성과관리 결과**를 **차년도 예산안**에 반영(매년 6~8월)

재정사업평가 예산환류 강화

□ 재정사업 **자율평가 단위**를 '23년부터 단위사업에서 **세부사업** 단위로 **개편**하는 등 **예산 환류 강화** 노력

○ **미흡등급** 세부사업에 대해 **△10%** 이상 **예산 삭감**을 원칙으로 하되, **총지출구조조정** 규모는 **평가대상사업 총예산**의 **△1% 삭감**

○ **3년 연속 미흡** 사업은 원칙적으로 **폐지**('23년도 평가부터 적용)

□ 기금의 **존치 타당성** 및 **사업·재원구조**의 **적정성** 등을 감안하여 3년 주기로 **전체 기금**에 대해 **제도개선** 및 **존치 여부 평가** 실시

○ **기금목적**의 **유효성** 및 **타 기금**과의 **유사성·중복성**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**폐지·통합** 등 **권고**

○ 평가대상 기금의 **개별사업** 및 여유자금 등 **재원구조**를 **평가**하여 필요시 **구조조정** 및 **신규 수입원 발굴** 등 **권고**

3 재정수입기반 확충 및 효율적 정비

세입기반 확충

□ **경제활력 제고**를 위한 **조세지원**은 **강화**하되, **불필요한 비과세·감면** 등을 **정비**하고, **조세회피 관리**를 **강화**하는 등 **세입 누수 요인 차단**

○ **투자·창업, 결혼·출산양육 지원** 등 ❶**경제활력 제고**와 ❷**미래 대비를 위한 조세정책**을 통해 **중장기 세원기반을 확대**

* ❶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확대, 기술 혁신형 M&A 요건 완화 등
❷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, 자녀장려금 확대,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

○ **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, 우회덤핑 방지제도** 등을 **도입**하여 **조세회피 행위**에 대한 **관리**를 강화

○ **조세지출 성과평가**를 **내실화**하여 **정책목적을 달성**하거나, **실효성이 없는 비과세·감면 제도**는 **종료** 또는 **재설계 추진**

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

□ **각 기금별 여유재원**의 **통합적 활용**을 통한 **재정여력** 확충

○ 회계·기금 간 **칸막이식 운용**을 지양하고, **기금별 여유재원**을 **통합적**으로 활용함으로써 **재정운용**의 효율성 제고

- 각 기금·회계별 재정상황 점검을 통해 **타 회계·기금**에 대한 **전출** 및 **공자기금 예탁**을 **적극 활성화**

○ **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**가 높은 기금 사업은 **지출 재구조화** 등 적극적인 **사업 재정비** 추진

부담금 제도개선

□ 최근 경제·사회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**기존 부담금**의 **부과 목적, 타당성**을 **재검토**하는 등 **부담금 제도 정비** 시행

○ **부담자 간 형평성, 수입 대비 지출 규모** 등을 감안하여 **부과 대상·요율, 인센티브 구조** 등의 **합리적 재설계** 추진

○ **예치금, 수수료, 협회비** 등 **부담금 성격을 갖지 않는**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**관리대상**에서 **제외**

○ **부담금 부과 목적**을 고려하여 **실효성이 낮거나 타 부담금**과 **유사한 성격**을 갖는 부담금은 **통합·폐지**

4 민간 역량 활용 확대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

민간투자 활성화

□ **민간투자의 적극적 역할**을 통해 **경제활력 제고** 및 **시장·민간 중심의 경제성장**에 기여

○ 산업화 시대 주요 시설인 도로·철도 중심에서 **산업 및 생활 인프라, 노후시설 개량** 등 **다양한 신규 대상을 적극 발굴**

○ **수익성 확보**를 위한 **사업모델 개발, 사업방식 다변화** 등을 통해 민자사업 **참여 촉진 및 투자 부담 경감**

○ 적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**사업초기 제안부담 완화** 및 **선제적 대상사업 관리** 등 **민간투자 신속 추진체계 마련**

민간·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촉진

□ **유휴·저활용 국유재산**의 **활용·매각 확대**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**경제의 역동성**과 **지역발전**을 뒷받침

○ **지자체 및 민간 수요에 대응**하여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은 **신속 매각·교환 등 지원**

- **국유재산 활용 협의회**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유재산 DB에 대한 **수요자의 정보접근성 향상**

○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**장기대부 방식***의 **민간참여 개발을 추진**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국유재산 개발

* 민간기업이 국유지를 장기임대하여 개발하고 임대기간 동안 투자금 회수 + 수익 창출 후 개발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. 국가는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재정수입 확충

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

□ **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촉진**을 위해 **계약대가 현실화, 입찰·계약절차 부담 완화, 업체 권익보호** 등 **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**

○ **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**을 **완화**(특정규격 자재 비중 1→0.5%)하는 등 **계약대가 적정성 제고**

○ **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준금액**을 **15~25억원**에서 **30~50억원**으로 **상향**하는 등 **입찰·계약절차 부담 완화**

○ **공기업·준정부기관 발주계약**에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하게 **입찰참가제한을 갈음**하는 **'제재금' 제도** 도입 등 **제재 부담 완화**

5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

재정준칙 법제화

□ 재정준칙 **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지속 추진**

*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('22.9.13) → 국가재정법 개정안(의원입법) 발의('22.9.20)

** 관리수지 △3% 한도로 두되, 국가채무 60% 초과시 △2%로 축소, 재정의 역할 담보를 위해 예외사유 등 보완장치 규정

○ 국회 주관 **공청회 실시**('23.3월), **법안 축조심사**('23.3~6월) 등을 통해 **법안 주요내용 국회 논의 진전**

- 법안 심사과정에서 **예외 적용 후**에는 **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**, 경제상황을 고려해 **시행시점**을 **조정**하는 내용의 **수정안 마련**

○ 지속적 협의를 통해 **법안 개정절차**를 **조속히 마무리**

공공기관 재정건전화

□ **불요불급한 자산 처분, 중장기재무관리계획** 마련 및 재무위험기관의 **재정건전화계획** 수립·이행 등 **공공기관**의 **재무건전성 개선 추진**

○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활용도 낮은 자산 등 **불요불급한 자산**을 **처분**하여 회수자금은 **재무건전성 제고** 등에 활용

○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**재무위험기관 「'22~'26년 재정건전화계획」**의 **수정계획**을 **수립**하는 등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

○ 공공기관 혁신계획,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한 **중장기 재무관리계획**을 **수립**하여 국회 제출(국가재정법 제9조의2)

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

□ **재정준칙 법제화 완료** 후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**재정위험**을 **사전**에 **식별**하는 **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 구축** 추진

○ **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,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** 등 선행 지표 관리를 통해 **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**

○ **적자성 채무, 사회보장성 기금수지** 등 **보조적 지표**를 통해 관리수지·국가채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**다각적 재정위험 점검**

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방안 수립

□ 중장기적 **인구구조 변화** 및 **성장세 약화, 복지지출 증가** 등에 대비한 **중장기 재정개혁 방안 수립**

○ 국민의 **'삶의 질 제고'**와 **'건전재정'** 등을 목표로 **혁신과제** 등을 마련하여 **재정지출 효율성 향상** 및 **미래 재정위험 대비**

○ 관행적으로 이어온 **재정지출의 구조와 방식의 전환, 민간 자원 및 역량의 적극적 활용, 재정칸막이 해소 등** 중점 추진

참 고 **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**

(1) 보건·복지·고용 분야

□ **저소득 취약계층**을 **더욱 두텁게 보호**

○ **생계급여,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, 재산기준·부양의무자기준 완화** 등 **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**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

- 일을 통한 탈수급 등 자립지원을 위해 **자활근로, 자산형성사업** 등 지속 확대

○ **노인일자리** 및 **기초연금**을 지속 확대하여 **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**

- **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**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

○ **최중증 발달장애인**에게 **체계적인 돌봄**을 지원하고,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여 **가족의 돌봄부담 경감**

- **장애인연금 인상** 및 **일자리 지원** 확대로 **소득안정 지원**

□ **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**으로 **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**

○ **가족돌봄청년**의 가족돌봄부담 완화, **고립은둔청년**의 사회적응, **자립준비청년**의 자립지원 등 강화

○ **한부모·청소년 부모**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**양육비 지원대상 지속 확대**

○ **다문화가정 자녀**의 **학습, 취업, 가족소통** 등 **맞춤형 종합 지원** 확대

□ 소아환자 **야간·휴일·지역 진료사각지대 해소** 및 **응급환자 최종치료전 사망사고**(응급실뺑뺑이) **근절 등**을 위한 **인프라 확충**

○ 달빛어린이병원,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,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을 확충하고,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

□ **국민의 정신건강 증진**을 위해 **정신질환 예방·조기발견**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, **정신질환자 응급대응·치료·복귀** 인프라 구축 등 지원

【참 고】 일자리 분야 '23~'27년 재정투자 중점

□ 청년고용·빈일자리 투자를 통한 **민간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**

○ **대학일자리+센터** 활용 재학생맞춤형 일자리 지원, **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, 청년 일경험** 등 **청년층**에 **양질의 일자리** 지원

○ **빈일자리 취업지원** 등을 통한 **노동시장 미스매치** 해소

□ **이중구조, 장시간 근로관행** 개선 등 **노동개혁** 뒷받침

○ **대·중소, 원·하청간 이중구조 개선**을 위해 **직무기반 임금체계** 도입·확산, **상생협력** 강화 및 **격차 완화** 등 지원

○ **근로시간 유연화, 포괄임금 남용 근절** 등 **장시간 근로관행** 개선

□ **육아휴직 등 활성화**를 통한 **일가정 양립 지원** 강화

○ **맞돌봄 확산** 및 **육아부담 완화**를 위한 **육아휴직** 및 **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**

○ 근로시간 단축·대체인력·단축지원 등 **육아휴직**에 따른 **사업주 부담경감**

□ 실업급여 등 **고용안전망 확충** 및 **고용서비스 고도화**

○ **구직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,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** 등 **고용안전망 확충** 지속 지원

○ 고용서비스 통합·연계지원을 위한 **통합센터**, 구직자·기업 도약패키지 지원 **상담인프라 확충** 등 **고용서비스 고도화**

□ 노인·저소득층 등 **취업취약계층** 위주 **직접일자리 집중지원**

○ **노인일자리, 자활사업** 등 **취업취약계층** 참여 **직접일자리** 사업에 **집중 투자**

(2) 교육 분야

□ **생애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**

○ 3~5세 누리과정 등 **기본 교육수요**를 **충분히 지원**하면서 다문화·장애학생 등 **소외계층 교육 포용**

○ **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**하고, **학자금 대출금리**를 **시중보다 낮게 유지**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

○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**고교취업연계장려금**, **평생교육 바우처** 등을 통한 평생·직업 교육 기회 확대

□ **대학의 자발적 혁신**을 유도하고, **성과중심 재정지원 확대**

○ 학과간, 학교간, 학교와 지역간 벽 허물기 등 **대학의 자율 혁신**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의 **구조조정 및 체계적 회생** 지원

○ **성과배분을 강화**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

□ **지역중심 대학 전환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**

○ **지자체 주도 대학재정지원 체계**를 구축하고,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를 **글로컬 대학**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

○ 반도체, 이차전지 등 **첨단분야 특성화 대학**을 지원하고, **단기 교육과정**도 운영하여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적극 양성

□ **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**

○ AI·디지털 교과서, 에듀테크 기술 활용 등 **디지털 기술의 교육 현장 활용**을 적극 지원

○ 해외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, 유학생 유치 활성화, 청년 국제교류 확대 등 **글로벌 역량강화 지원**

(3)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□ **K-콘텐츠 경쟁력 강화** 및 **한류의 지속성·확장성 확보**를 위해 콘텐츠 기업 **정책금융 공급 확대** 및 **해외진출 지원 강화**

○ **콘텐츠 IP펀드, 민관합동 전략펀드, 영화 상생펀드** 등 **정책금융 수단 확충**으로 **콘텐츠 제작지원** 강화 및 **독자 IP 확보** 지원

○ 콘텐츠 **수출 해외거점, 해외홍보관, 한류박람회 확대**를 통한 **수출시장 다변화** 및 연관산업 동반진출 등 **전략적 수출지원**

□ 취약·소외계층 및 지방의 **문화양극화 해소**를 위해 **문화 바우처·프로그램 확대** 및 지역 **수요맞춤형 문화예술 지원 강화**

○ **통합문화이용권, 스포츠강좌이용권, 장애인 대상** 예술활동·생활체육 **프로그램 확대** 등을 통한 **취약·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**

○ **지역 수요맞춤형 문화예술 기반 강화, 공연·전시 확대**를 통한 **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보장** 및 문화취약지역 활력 촉진

□ **관광시장 완전한 회복** 및 **지역 관광콘텐츠 육성** 지원

○ K-컬처·치유·전통문화 등 **경쟁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**를 **활용**한 **관광매력국가 이미지 제고** 및 **방한관광 활성화** 지원

○ **지역관광 경쟁력 제고**를 위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등 **인프라 확충** 및 독창적 **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·육성**

□ **일상적 체육활동 기반 확충,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, 국제대회 개최·참가 지원 확대** 등 **생활·전문체육 역량 강화**

○ 취약계층 대상 **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** 및 연령별 **맞춤형 체육시설·프로그램 확충** 등 **일상적 생활체육 활동 기반 확충**

○ **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, 국제대회 개최·참가 지원 확대** 등 **전문 엘리트 체육활동 적극 지원**

(4) R&D 분야

□ AI, 첨단바이오, 반도체, 디지털 등 **혁신기술**의 **내재화**에 정부 R&D 집중투자

○ **한계 돌파(학습·소통능력, 신뢰성) R&D, 산업난제 해결·메타버스 융합** 등 응용서비스, **초거대 AI 생태계 구축**

○ **바이오헬스**에 **AI, 빅데이터 등 ICT·디지털을 융합**한 첨단바이오 중심 투자로 신시장 선점

○ 미세공정 한계 극복을 위한 **첨단 패키징 기술개발, AI반도체 기반 기술 개발**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

* 반도체 패키징, 차세대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 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10년간 장기 투자하는「초격차 프로젝트」추진

○ **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을 고도화**하고, **기존 기술간 연계·융합**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바이오·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**대규모 전략프로젝트**(flagship) 추진

○ **고비용·고난도**이나 **파급효과가 큰 바이오분야 난제**를 **혁신적 R&D 지원 시스템 아래 수행**하는 **KARPA-H 프로젝트 추진**

* 美 DARPA형(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) R&D 수행

○ 민간의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**민간 발사장, 우주환경시험시설, 특화지구별 거점센터** 등 **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**

□ 국내 연구진·자금 중심의 **폐쇄적인 연구 체계**를 **극복**하고 세계 **최고**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**글로벌 R&D 확대**

○ **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,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지원** 등 **국제협력 사업 확대**

○ 첨단바이오 분야의 선진기술 접목 및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**「보스턴-코리아 프로젝트」**를 **'팀 코리아'**로 추진

*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 확대 등

(5)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

□ **첨단전략산업·제조업** 집중 투자를 통한 **미래성장동력 확충**

○ **반도체·이차전지·디스플레이** 등 첨단전략산업의 **초격차 경쟁력 확보**를 위해 **인력양성, 인프라** 등 전방위 지원

○ 제조기업 대상 **스마트 그린산단, 스마트공장 고도화** 등 지속 지원

□ **수출 드라이브 추진 + 투자 인센티브 강화**로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

○ **무역금융, 해외마케팅, 디지털 수출** 지원 등으로 수출 애로를 완화하고, **원전·방산·플랜트** 등 유망분야 집중지원

○ **외국인투자, 국내복귀 투자** 촉진을 위해 **현금지원 인센티브 강화**

□ **효율적 에너지 사용**을 **지원**하고, **에너지 공급망 안정화**

○ **에너지바우처 확대, 주거공간 효율향상** 등 에너지 약자 보호

○ **중소기업, 소상공인** 등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**에너지 효율 진단 컨설팅** 및 **고효율 설비 보급** 지원 확대

○ **핵심자원 비축** 및 **도입선 다변화** 등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, **원전** 및 **신에너지 생태계 활성화** 지원

□ **글로벌 창업지원, 지역벤처 활성화** 등 **스타트업코리아** 추진

○ **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신규 조성, 해외창업 사업화자금 신설**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

○ **지역 엔젤투자허브 확대,** 지자체가 추천하는 **예비유니콘 기업 보증 지원** 등 지역 벤처·창업 생태계 고도화

□ **취약 소상공인**의 **경영 부담**을 **완화**하고, **경쟁력 강화** 지원

○ 취약차주 대상 **저리 대환대출 신설, 고효율 냉방기 보급,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** 등 각종 비용 부담 경감

○ **유망 소상공인**에 창업·팀빌딩 등을 종합 지원하고, **스마트 상점·공방, e커머스**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지속

(6) SOC 분야

□ **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** 및 **지역 혁신거점 조성**으로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

○ **GTX 기존 노선**(A·B·C)을 **차질 없이 지원**하고 **신규 노선 확대**를 검토, **대용량 교통수단 도입 확대**로 혼잡 완화 지원

○ **신규 고속도로·국도** 확충, **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**으로 **메가시티 1시간, 전국 2시간 생활권** 조성 촉진

□ **기후변화** 등에 따른 **대형사고 예방**을 위해 **노후시설 유지보수·개량** 적기 추진, **근로자 작업안전** 확보 지원

○ **안전시설물 정비** 및 **교량·터널 유지·보수 강화, 지하차도 침수방지 시설 확충**으로 도로 환경 안전성 제고

○ **선로시설·전기설비 집중개량**으로 **열차 탈선 방지,** 안전난간 등 **작업자 안전시설 확대**

□ 누구에게나 **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** 조성

○ 이용횟수 비례로 교통비를 할인하는 **K-Pass 도입**으로 **편의성 개선 및 교통비 부담 경감** 확대

○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**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** 및 **운영비 지원**,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

□ **미래 교통환경 변화**에 **대응**하고 **교통 분야 신산업 육성**을 위한 **기술혁신 지원**

○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**규제 샌드박스 운영 지원** 및 **자율차 상용화 지원 확대**

○ 도심항공교통(UAM) 상용화를 위한 **도심지 항공교통지원 시설 구축** 및 **실증노선 운영,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도입**

(7)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

□ **직불금 확대** 및 **농수산물 수급안정**으로 농어가 소득보호

○ 소규모 농어가 **직불금을 보다 두텁게** 지원하고,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**수입보장보험 지원 확대**

○ **은퇴직불 도입**으로 고령농에서 **청년농으로 농지 이양**을 지원하고, **전략작물직불 확대** 등 쌀 적정생산 유도로 **농업 경쟁력 제고**

○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**수급관리**를 **선제적·과학적**으로 전환하고, **일시적 수급불안** 대비 **공공비축** 등 **대응능력 강화**

□ **청년 농어업인 육성**, 유망 **농식품기업 발굴** 등 미래농어업의 **튼튼한 성장 기틀** 마련

○ **청년**의 **농어촌 유입·정착**을 **촉진**하기 위해 **청년 농어업인**에 대해 **농지, 창업, 주거, 자금** 등을 두텁게 지원

○ **민간 역량**을 활용하여 **유망한 농식품기업 발굴·육성·성장**을 적극 **뒷받침**하고, **스마트팜 창업 지원** 등 스마트농업 확산 도모

○ 국산 농산물 **품질 제고** 및 **수출농가 조직화** 등 **수출경쟁력 제고**

□ **농어촌 생활환경** 개선 및 **농어업인 복지** 지속 지원

○ 농어촌 **유해시설 정비, 생활인프라 개선**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농어민 **노후대비**를 위해 **건강·연금보험료 지속 지원**

○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**외국인 등 인력확보 및 매칭 지원**을 강화하고, 농촌 거주자의 **건강권 보호 강화**

□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되는 **재해로부터 보호 강화**

○ **스마트 재난관리체계** 구축 및 배수개선 등 **수리시설 보강**으로 농축산 **재해**를 **예방**하고, **재해보험** 확대 등 **경영안전망 확충**

○ **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확대** 등 **산사태 예방 및 산불 진화**를 위한 **장비 확충**으로 **산불 대응 역량 강화**

(8) 환경 분야

□ **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·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**

○ 상시화된 극한 호우 대응을 위해 **홍수·침수 방지 인프라 지속 보강**

* '23년 충청·전북·경북 홍수, '2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, '20년 남부지방 장마 등

-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설치 지원 등 **도시침수 방지**를 위한 **환경기초인프라 등**에 **투자 확대**

○ 반복되고 심화되는 가뭄에도 **국민 생활**과 **산업**에 **필요한 물**은 **공급**

* '22~'23년 남부지방 가뭄('74년 이후 최장가뭄), '15~'17년 충남 서부권 가뭄 등

- 하수재이용 등을 통한 **신규 수자원 확보 노력 지속**

□ **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, 저탄소 경제**로의 **전환 가속화**

○ 탄소중립·물·순환경제 등 **3대 녹색新산업**을 **집중 육성**하고, 수출 인프라·해외실증·수출금융 등 **전주기 수출지원체계 구축**

* 국내 환경산업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('16~'21년) 0.74% 수준으로 정체 상태

○ **저탄소 기술개발* 투자 확대** 및 **기업 설비전환 지원, 글로벌 환경규제** 대응** 및 **핵심 원자재 확보**를 위해 **순환경제 활성화**

* 탄소중립기술에 '25년까지 全세계가 매년 2조 달러 투자 예상(맥켄지, '22년)

** (EU) 핵심광물 역내 재활용법('23.3월), (UN)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 추진(~'25년) 등

□ **환경 취약계층 복지 강화**, 대국민 **쾌적한 환경서비스 지속 제공**

○ **환경보건 피해자 안정적 구제 지원** 및 **환경취약지역 지원 확대**

○ 23번째 국립공원(팔공산 국립공원) 지정 등 국민들의 **친환경 여가 인프라 투자 강화**

(9) 국방 분야

□ 北 **위협 고도화**에 **선제적으로 대응**하고, **미래 전장을 주도**하는 **AI 기반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** 지원

○ 北 핵·미사일 및 다양화되는 **위협의 억제** 및 압도적 **대응능력 강화**를 위해 **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***

*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 강화, 전투기 성능개량, 특수헬기 작전능력 제고 등

○ 드론 등 **유·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**, 우주·사이버 등 **미래 전장 환경 주도**를 위한 **원천 핵심기술 확보** 등 **비대칭 전력 보강***

*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, 보병부대 무인차량 도입, 근거리정찰드론, 초소형위성 개발 등

□ **수출경쟁력 강화**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 **방위산업 육성** 추진

○ **국방 신산업**(우주·AI 등) 분야 **유망 중소기업 육성**, 부품 국산화 및 수출 무기체계 개조·개발 등 **미래 먹거리 산업화** 지원

□ MZ세대 및 **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 여건 조성**을 위해 **의·식·주 등 지속 개선**

○ 병영생활관을 2~4인실로 지속 개선 및 **플리스형 스웨터** 全 **장병 확대 보급, 얼음정수기**를 **전군에 신규 보급**

○ **녹물관사 제로화 등 주거여건 획기적 개선** 및 **장려금 인상을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**

* '녹물관사' 제로화, 노후숙소 전량 개선, 모듈러 숙소 건립,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(3년이상 복무 → 3년미만 간부 포함),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등

□ **병역의무 이행** 및 **국가를 위한 헌신**에 대한 **합리적 보상 강화**

○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**병봉급**(사회진출 지원금 포함)을 **'25년까지 단계적 인상** 추진

(10) 외교·통일 분야

□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 및 **글로벌 중추국가**로서 **역할과 책임 이행**을 위한 **ODA 확대 추진**

○ 우크라이나에 대한 **연대에 동참**하고, 향후 **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**을 위하여 **對우크라이나 지원 확대**

○ **우리 기업·인력 진출에 ODA를 활용하여 청년인재 해외진출** 및 우리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**디지털 분야 지원 확대**

□ **2024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, 2025 APEC 의장국 등 국제사회 내 위상제고**를 위한 **능동적 외교 지원 확대**

○ **2024-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, 인도-태평양 전략 이행**으로 **글로벌 가치·국익 외교 본격 전개**

○ **양자·다자간 경제협력** 등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·기후변화 등 **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** 및 의제 설정 주도

□ **재외동포청 출범**에 따른 **재외동포 지원·보호체계 강화**

○ **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동포 모국 초청**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

○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육·문화·경제·사회 등 다양한 분야 **교류 및 유대강화**를 통한 **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**

□ 객관적인 **북한인권 정보제공**을 통한 **대국민 공감대 형성**

○ **북한인권 실상**에 대한 **콘텐츠 제작** 및 **북한인권전시관 건립** 등을 통한 **대국민 공감대 형성** 및 **국제사회 관심 견인**

〔11〕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□ **마약·보이스피싱** 등 **국민일상**을 **위협**하는 **민생침해범죄 예방·대응**을 **강화**하고, **아동·여성** 등 **범죄피해약자**에 대한 **지원 확대**

○ **스토킹, 보이스피싱, 디지털성범죄**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**자금추적·사이버수사** 및 **국제공조** 역량 강화

- **마약범죄 근절**을 위해 **예방교육, 수사·감시 장비 도입, 재활치료** 등 **예방→수사→재활 전주기**를 **체계적 지원**

○ **아동·여성·장애인** 등 **범죄피해 약자**에 대한 **상담·조사, 진술조력** 및 **법률·경제적 지원** 등을 **맞춤형**으로 **제공**

- **수용시설 과밀·노후화 해소**를 위한 **인프라 확충,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**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

□ **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호우 피해**에 **대응·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**하고,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**도심침수 방지** 강화

○ **풍수해 예방**을 위해 **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**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, **붕괴위험 급경사지·위험저수지 발굴 및 정비** 확대

○ **도심지 저지대 침수방지**를 위한 **우수저류시설을 지속 설치**하고, **침수우려 위험도로 방지시설** 조기 도입

□ **디지털플랫폼을 활용**한 **국민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,** 지진·화재 등 **안전훈련을 강화**하여 **현장 대응력 제고**

○ **재난관리·안전정보 등을 통합**하여 재난상황시 **신속대응 지원,** 대국민 **재난안전 정보서비스 맞춤형 제공** 추진

○ 대규모 **지진대응·실화재 훈련장 건립** 등을 통한 소방력 향상 도모, **재난대비 훈련 내실화**를 위한 국가 차원의 **평가·컨설팅 강화**

(12)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□ **지역소멸 대응**을 위해 **지역활성화 투자 펀드**를 조성해 **지역경제 효과**가 큰 **대규모 사업**을 속도감 있게 추진

* (예시) 스마트팜,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, 복합 관광리조트 등

○ **빈집**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, 로컬창업공간, 마을쉼터 등 **지역 특화사업**을 추진하도록 **민관 협업 지원**

○ **생활인구* 확충**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삼기 위해 **생활인구 빅데이터** 수집·결합·개방

*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

□ **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**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, Any-ID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

○ 지자체 CCTV에 **지능형 관제체계 도입,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투자 확대** 등 **과학적 재난관리 지원**

○ **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확대**도 적극적 추진

□ **수해 예방**을 위해 **비탈면, 산지** 등 **재해위험지역 정비, 침수 위험도로 자동차단시설** 설치 대폭 확대

○ **재난대책비, 풍수해보험** 확대 등 **재난대응·회복** 지원 확대

○ 대규모 **지진대응·실화재 훈련장 건립** 등 소방 대응력 제고, **지역별 안전진단**을 통한 **위험요소 발굴·개선** 추진

□ **소상공인 채무조정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** 등 **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**

○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**청년도약계좌 지원**

【별 첨】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

분야	지 표 (예 시)	'23년	'27년
보건・복지・고용	▪ 기초연금 수급자수(만명)	665	817
	▪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인원(만명)	14	17
	▪ 공공보육 이용률(%)	37	50
	▪ 국민연금 수급자수(만명)	677	905
교육	▪ 글로컬 대학 수(개교, 누적)	10	30
	▪ 평생교육바우처(만명)	6	10
문화・체육・관광	▪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(조원)	156	200
	▪ 문화콘텐츠산업 수출규모(억달러)	132	250
	▪ 외래관광객 수(만명)	1,000	3,000
	▪ 국민생활체육참여율(%)	64.0	68.4
R&D	▪ 첨단전략분야 R&D 투자(조원)	5.0	6.0
	▪ Flagship 프로젝트 투자(조원)	-	0.6
	▪ 글로벌 R&D 투자(조원)	0.5	2.2

분야	지 표 (예 시)	'23년	'27년
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▪ 스마트공장 수준 제고 (고도화 1 이상, 누적)	8,000	12,000
	▪ 반도체 아카데미 인력양성(누적)	520	3,720
SOC	▪ 고속도로 연장(km)	4,276	4,763
	▪ 철도 연장(km)	4,370	4,924
농림·수산·식품	▪ 청년농 육성(만명)	1(수준)	3(누적)
	▪ 어촌 신활력 증진(개소)	65	300(누적)
환경	▪ 무공해차 누적 보급(만)	71.6	233.1
	▪ 온실가스 배출량(백만톤)	633.9	585.0
국방	▪ 노후시설 개선(개) / 모듈러 숙소(실)	14,473 /40	41,780 /250
	▪ 과학화 훈련장 확충(개소)	5	13
외교·통일	▪ ODA 총 규모(조원)	3.57	5.30
공공질서·안전	▪ 교정시설 과밀수용률(%)	107.6	104.0
	▪ 재해위험지역 정비(개소, 누적)	4,319	4,919
일반·지방행정	▪ 지능형 CCTV(만대)	13	53
	▪ 지역활성화투자 펀드(모펀드, 조원)	-	1.2